

與 2차 특검 강행… 국힘, 필리버스터·무기한 단식 ‘맞불’

민주, ‘2차 특검’ 본회의 처리 나서
필버 첫주자로 개혁신당 원내대표
野, 與 입법독재 비판 규탄대회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의 관한 법률안)을 표결 처리하려 했지만,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리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하며 지연 전략을 펼쳤다. 이와 함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보는 민주당 비위 의혹을 겨냥한 ‘통일교 정교유착-공천헌금 특검법’ 추진을 위해 단식을 시작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해 본회의의 상정 안건을 조율했지만,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한 데 모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이미 대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써가며 수사를 마쳤는데도 특검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내란몰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차 종합특검법안은 최대 170일 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실종, 특검폭주 중단 촉구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뇌물·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안의 수사 기간 동안 검사 30명, 검사와 공무원 70명 총 100명의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 집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정당(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전성배(건진법사) 등의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총선 선거개입 의혹

▲김건희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 부당 개입 의혹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과정 부당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이다.

2차 종합특검법안은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다만 첫 주자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다. ‘통일교 정교유착-공천헌금 특검법’ 도입을 위해 두 보수정당이 연합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은 살아 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 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를 건을 제출하고 토론 24시간이 경과한 16일 오후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마치고 여당의 입법독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실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통일교 정교유착-공천헌금 특검법’ 도입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장 대표는 “천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서는 순간,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며 “천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국민의 맘에 와닿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특검법 무도함과 특검법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제 단식을 통해 국민께 더 강력히 목소리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실용외교’ 李 “中日외교, 협력 지평 넓혀”

제19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국민 체감 국정실현에 역량 집중”

1박2일 일본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우리는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의 연이은 정상외교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연초부터 중남미·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 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금은 국내정치의 역할도 더없이 막중하다”며 “단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가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외교적 성과를 거두더라도 국내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국익을 챙길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의 책임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 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책의 성패는 공직자의 책상 위가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결정된다”며 “보고서상 그럴듯하고 실생활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는 정책은 영혼도 생명력도 없는 그야말로 공

허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 주도 복지 시범사업인 ‘그냥드림(떡거리 기본보장 코너)’ 사업을 일제로 언급하며 “지난 정부 예산을 받지 못했지만 민간협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이 지난해부터 조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겨울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면서 현장 반응도 좋고 이제는 사업장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많다”며 “각 부처는 이처럼 실제 효과를 내고 있는 우수 국민 체감 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관련 공직자들을 포상하고 또 이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상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꾸준히 쌓아 국민 삶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국민체감 국정 실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아랍에미리트(UAE)의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 비행정청장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李 “모하메드 대통령 초청, 성과 만들자”

칼둔 UAE 행정청장 만나
방위산업 협력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행정청장을 만나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UAE 한국 담당 특사인 칼둔 청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어떤 일을 할지 세부적인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잘 협의해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칼둔 청장의 방한은 이 대통령의 지난해 UAE 국민 방문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해 이뤄졌다. 앞서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방산 분야에서 무기체계 공동개발을 비롯해 현지 생산, 제3국 공동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원자력 등에 더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UAE가 앞으로 100년 동행하는, 우리말로 100년 해관계로 만들기로 했는데 청장이 오셨으니 실질적인 발전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모하메드 대통령이 빠른 시간 내 한국을 국민 방문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조만간 한국을 국민 방문할 거라 믿고 그때 실질 성과를 만들게 잘 준비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 UAE는 매우 중요한 우방 국가이며, 우리가 방문했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환대할 걸 국민들도 기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청장님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칼둔 청장은 “모하메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을 형제이자 친구로 UAE로 맞이했던 시간을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각별하게 부탁하셨다”며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서예진 기자

韓 재심 생각 없다는데… 張 “소명 기회”

제명 여부 두고 국힘 의원 갑론을박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을 의결할지 관심을 모았으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을 청구할 기회를 주겠다며 소명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윤리위)가 자신의 제명을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재심을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으며 의원총회에선 한 전 대표의 제명 여부를

두고 의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원 계시관 논란으로 당 윤리위에 제명 징계 결정을 받은 한 전 대표를 두고 “최고위에선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 기간까진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는 결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를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할 때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에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최보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심의 청구 기간을 부여하고 그 이후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라며 “대표가 최고위원뿐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은 정해 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라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재심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